

재정패널 소식지

2019년 제2호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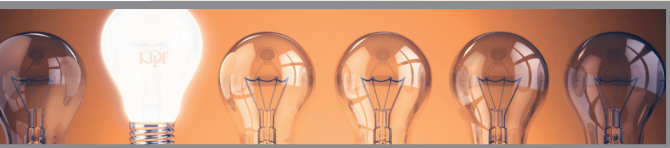
2019년 제2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소식지

2019년 제2호

재정패널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06
11차년도 가구원 의식조사 안내	07
11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08
2019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10
재정패널 활용 연구	32
재정패널 활용 기사 목록	36

재정패널 소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재정패널 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19년 12월 11차년도 자료 공개 예정
- 2019년 현재 12차년도 조사 진행 중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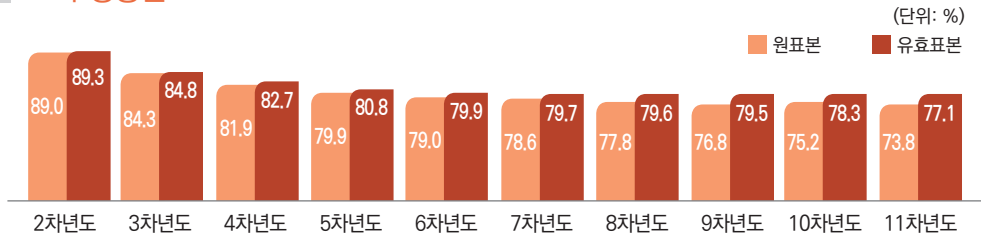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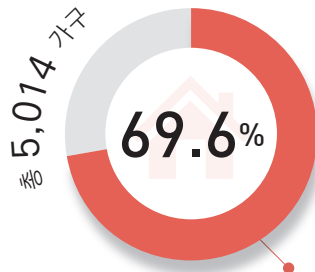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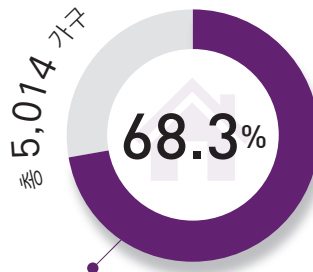
조사 성공률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시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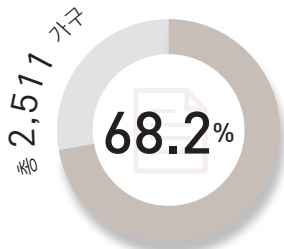


10년 연속 응답 표본 3,488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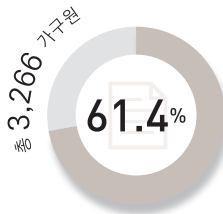


11년 연속 응답 표본 3,423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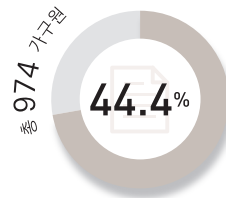
11차년도 소득 증빙서류 수집률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1,713가구



근로소득 연말정산 2,004가구원



종합소득 신고 432가구원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재정패널 공식자료

- 1) 제공 범위: 1-10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2)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3) 11차 자료: 2019년 12월 재정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
-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11차년도 가구원 의식조사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10차년도부터 변경된 “가구원 의식조사”를 통해 조세, 복지 등에 대한 각 가구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가구원 의식조사”의 하위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1차년도에는 납세관련 태도 및 조세·세무 행정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경 공개될 재정패널 11차년도 데이터 및 관련 자료 등에 안내될 예정이다.

〈표〉 11차년도 의식조사 문항

분류	조사내용
A	사회·정치에 대한 인식
	타인(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에 대한 신뢰 정치적 성향 및 관심 투표 참여 여부
B	조세·복지 제도
	세금 납부 정도 세금과 정부혜택에 대한 인식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금 납부 정도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 계층 간 소득격차 복지 수준 및 축소/확대 부문 세 부담 및 복지 수준
F	위험회피 상품 투자배분 상황 응답
E	건강·은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기대수명 은퇴 및 적정 노후 생활비

* 11차년도에 수정·추가된 항목임

11차년도 부가조사 안내

재정패널조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에만 한시적으로 신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11차년도에는 1998년 이후 결혼 또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의 출산관련 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부가조사를 진행하였다. 11차년도 부가조사의 하위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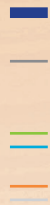
11차년도 부가조사는 출산 경험, 출산 당시 경제활동상태, 출산관련 지원제도, 출산가구원 취업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12월경 공개될 재정패널 11차년도 데이터 및 관련 자료 등에 안내될 예정이다.

〈표〉 11차년도 부가조사 문항

조사내용
<p>출산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출산 경험 유무 미성인 자녀 유무 결혼 경험 유무
<p>출산 시 소득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자녀 수 출산 시기(년, 월) 출산 전 소득활동 유무 출산 전 소득활동 업종 및 종사상 지위 출산 전 소득활동 사업체 유형 및 규모
<p>출산 시 출산 관련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지원제도 제공 여부 출산 지원제도 즉시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경험 출산 지원제도 사용 개월 수 출산 지원제도 지원 금액
<p>출산가구원 취업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전·후 일자리 유지 여부 출산 전·후 바뀐 소득활동 비교 출산 전 퇴직 이유 자녀 미출산 이유 출산 후 실직 시 생활비 마련 방안 및 필요소득



www.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19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지난 9월 27일 개최된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재정패널 홈페이지(panel.kipf.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교육투자수익률을 통한 세액공제변경의 재분배효과 추정

신우리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보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2013년 세법개정안’의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를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제개편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시간당임금의 분위가 낮은 구간에서는 세전의 교육투자수익률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시간당임금의 분위가 높은 구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차이가 커지는 추이를 보였다. 세제개편 이전에는 시간당 분위가 높은 구간에서 나타나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제개편 이후에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3년 세법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간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 차이를 감소시켜 세후 임금불평등을 축소시키므로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누진도 분석

유혜미 한양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 1차부터 11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처분소득을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담을 차감하고 복지수혜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고 이 가처분소득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소득세 누진도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는 0.196으로 추정되었는데 동 기간 중 소득세 누진도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추정치는 가처분소득 대신 가구소득에 수혜를 더한 가구총소득을 이용해 추정한 소득세 누진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누진도 변화가 복지수혜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1-3

연산가능 일반균형(CGЕ) 모형에서의 가계부문 이질성 확대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은 다양한 정책의 파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소득분배나 빈곤 분석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모형 내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통상적으로 CGE-미시시뮬레이션 통합모형으로 불리는 이 모형은 분배에 대한 다양한 연구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분석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방식의 CGE 모형에서 가계부문의 이질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2014년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한 다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소비에 대한 이질성을 보완하였다. 진행과정에서 가계부문의 수지 균형 조건과 사회회계행렬의 제어치를 일치시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며, 각 가계에 대하여 Engel aggregation을 부가한 상태에서 미시 사회회계행렬을 balancing시키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향후 이 연구가 완성되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감안한 노후소득보장 문제, 복지지출과 자원조달의 효과성, 조세부담 및 사회수혜의 형평성 등에 대한 일반균형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현금과 현물의 차별적 파급효과 분석, 공적연금이나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등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II-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 개인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ISA 도입이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SA가 금융투자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서민)층에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투자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ISA 도입이 저소득(서민)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서민 자산형성이라는 정책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서민 금융투자 참여 및 투자액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따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II-2

위험회피성향과 보험수요의 이론과 실제

김대환 동아대학교 부교수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보험경제학 이론의 개발과 발전 이후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웠거나,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설문문항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설문문항이 존재하는 동시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패널조사에서 별도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한 위험회피성향이 개인의 실제 위험회피성향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분석한 결과와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한 결과, 위험회피성향 변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결론내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설문문항만으로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차원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향후 개인의 위험회피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재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II-3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

박명호 홍익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제도 확대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은 제11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제도 개편의 효과는 2019년 4월 이후의 현행 기초연금제도하에서의 소득분배지표 및 빈곤 지표들과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 및 2018년 9월 이후의 기준연금액의 인상 및 감액제도 변경 등의 제도개편이 없었을 경우에서의 소득 분배지표 및 빈곤 지표들과 대비하여 분석한다. 특히 기초연금액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액 확대의 순효과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자체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개편은 지니계수를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5분위배율 및 빈곤율과 빈곤갭률에는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기초생보 생계급여의 감액효과를 감안하면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II-1

자녀양육지원금과 기혼여성남성인력의 종사상 지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김현동 동국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자녀양육지원금과 기혼남녀의 종사상 지위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재정패널조사는 출산에 대한 조사를 6차 2012년부터 시작해서 11차 2017년까지 6년 동안 실시하였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데 2년은 소요되므로 독립변수인 자녀양육지원금과 종속변수인 출산 간 2년의 차이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자녀양육지원금과 인구통계학적변수는 재정패널조사 4차 2010년에서 9차 2015년 자료를 그리고 출산관련 자료는 재정패널조사 6차 2012년에서 11차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에서 재정패널조사 자녀양육지원금은 출산을 높인다고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임시직이면 자녀양육지원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분산분석으로 종사상 지위와 출산관련비용을 분석해 보았다. 기혼남성이 자영업자면 출산관련비용이 높아지지만 기혼남성이 임시직이면 출산관련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지원금은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사한다. 또한, 여성인력에게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자녀양육지원금의 효과가 높아져 여성인력의 출산양육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된다.

»III-2

**교육비 지출의 변화와 격차분석
- 사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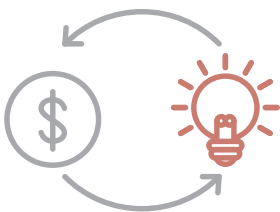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7~2017년 기간 동안의 학령기 자녀(19세 미만)의 성장(연령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 수준을 분석하고, 가구간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격차와 가구내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 문제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이 가구 수준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어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 양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은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의 2007~2017년 가구자료 중 교육비 지출액 정보를 활용하여 19세 미만 전체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패널을 재구성하였으며, 성장 곡선 모형(growth curve model)을 통해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과 소득분위와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궤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령의 변화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둘째 가구 소득분위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고소득 집단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태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가구 소득의 변화는 연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III-3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 (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홍우형 한성대학교 조교수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별이형태별로 차등지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부부가구에 직접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충격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소득자의 특성별 분석결과, 여성, 20~50세, 노동취약계층에서 노동공급이 증대되는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양(+)의 노동공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 IV-1

Vehicle Brand Selection: Multinomial Logit Model

김병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We develop the model of multiple choice of McFadden(1974) that find the determinants of firms for choosing several alternative brands of automobiles: Hyundai, Korean GM, Kia, and SsangYong, etc.

We performed four types of discrete dependent variable models. Estimation of binary probit results shows, as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family, the choice for GM increase. Discrete LS with breaks and discrete threshold regression shows that the marginal effect on choice of specific automobile is affected by the attributes of alternatives such as the price of car and the capacity of engine(CC). We also estimated the semiparametric model of maximum score.

In the case multiple choice estimated by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lead to the guess that higher family income increase the choice of Kia and (Korean) GM. Using NaSTab data in Korea, the estimation of conditional logit was difficult since we have choice-specific data.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both affect the choice of car brand of Korean consumers.

» IV-2

이중 수요 및 중독 모형을 이용한 담배 가격탄력성 추정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 수요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중수요함수와 중독모형을 바탕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재추정한다. 흡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사회적 의견 불일치로 인해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정부가 담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을 인상하였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담배가격 인상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이 이와 같은 가격변동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 수정 및 논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IV-3

2014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효과 분석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
설귀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본 연구는 5차(2011년)~11차(2017년) 『재정패널조사』자료로써 2014년 담배소비세 인상의 동태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14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후 평균 연간 담배구입 지출액 추세를 보면, 2011년 27.8만원에서 2014년 20.2만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인상 직후인 2015년에 30.4만원으로 급증하였지만, 다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담배구입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1년 각각 0.66%, 0.96%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3개 추정모형과 무관하게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가구단위 담배구입액이 증가하였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가구 및 개인단위 분석결과에서 담배소비세 인상 이후 담배구입액이 증가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출액 증가폭이 줄어들어 금연보다는 구입량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여 중독재인 담배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담배소비세 인상을 금연이 아닌 담배소비량 감소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미 2014년 이전부터 흡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가격정책을 통한 흡연율 저하 노력보다는 금연지원센터 활동과 같은 각종 금연사업, 금연 홍보 사업 등으로 금연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I-1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김병남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재정패널 5~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추가 세 부담 의향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직접 기부를 선호하고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인식할 경우 종교기관을 통한 간접 기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제도에 관심이 없을 경우 기부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와는 달리 정부지출과 민간기부의 관계에서 구축효과와 구인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구인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민간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VI-2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신영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결과 복지확대 의식과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일관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을 높게 답할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의 직접적 복지 등 혜택 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 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 의향이 크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경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인 확률이 높았다.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VI-3

매칭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한 복지의식 변화에 관한 종단 연구

손용진 부산노인건강센터 자문위원

2008년 제5대 공적사회보험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평가의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가족원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정패널 9차(2016년)와 11차(2018년)의 2개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채택하였다. 매칭성향점수 매칭 방법과 이중차이 방법을 결합하여 두 시점(9차~11차)에서 복지의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재정패널 의식조사표에 속해 있는 조세 및 복지제도의 문항 중에서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 항목을 복지의식 변수로 조작하였다. 공변량 변수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경상소득, 가구원 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수혜여부이다. 처치변수는 장기요양보험 수혜여부이다. 복지의식 차이 점수는 수혜자 가족과 비수혜자 가족 구성원들의 차이점수를 취하였다. 이변량 분석에서, 2016년에는 수혜여부는 복지의식과의 관련성이 없었고, 2018년도에서는 그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칭된 이중차이분석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들이 비수혜자에 비하여 저소득층/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당사자들의 복지 의식에 흐름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VII-1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조교수

조세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상당 수준의 관심과 지식이 요구된다.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신념을 조사하는 경우 직면하게 되는 의문점은 설문 응답자들이 과연 현행 조세시스템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세 및 재정에 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여부이다. 조세제도에 대한 사전지식과 경험의 차이는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념 및 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이해력(tax literacy)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지식 수준의 현황 및 조세이해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납세자 교육 및 홍보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패널 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 중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 항목을 조세이해력의 대리변수로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들의 경제적·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조세이해력의 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지식의 객관적인 측정치를 활용하여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에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 VII-2

유류의 가격구조가 취득차량의 유형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심리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취득차량의 유형 등을 바탕으로 상반된 측면의 요인인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휘발유 및 경유 차량 간의 취득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지불가능 금액(W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반대의 선택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유보요청 금액(UTP)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분석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현실의 상황과 함께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을 구분해서 수행하였다.

5차연도(2011년)부터 10차연도(2016년)까지의 분석대상 기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현실의 상황 및 가상적 상황에서 모두 유류세가 부과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휘발유 차량 선택 시 동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추가적 연료비 부담(CO2EXP)이 증가할수록 휘발유 차량의 취득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취득차량 유형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 연료비 부담(CO2EXP)과 유류비(LNOIL)의 결합변수도 종속변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서 추가적 연료비 부담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유류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역시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취득차량 유형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경제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휘발유 차량의 취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휘발유 차량 선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 취득자들이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휘발유 차량 취득자들이 요청하는 소비자가격의 심리적 인하 정도가 인하요청 유보금액(UTP)인데, 유류세가 부과되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리터당 11.55원~14.29원으로 나타났고, 유류세가 없는 가상적 상황에서는 리터당 21.04원~39.89원으로 나타났다.



» VII-3

실거래가 반영률과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강성훈 한양대학교 조교수

정부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추정한다. 이는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되, 실거래가격보다는 일정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모든 주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공시가격이 산정된다면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증가할수록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지거나 증가한다면 이는 수직적 형평성을 역진적 또는 누진적으로 저해한다. 또한, 유사한 시장가격을 가진 주택들의 공시가격 비율의 편차가 클수록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 연구결과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수직적 형평성이 역진적으로 저해되고 있으며, 시장가격이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수평적 불형평성이 관측됨을 보여준다(Sirmans, et al., 2007; Goolsby, 1997; Allen and Dare, 2002; Birch, et al., 2004, Smith, 2000). 하지만 Cornia and Slade(2005)는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Arizona의 경우, 수직적 불형평성이 관측되지 않으며, 수평적 불형평성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최근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시가격 추정에 대한 방법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선형 회귀분석 모형은 주택가격과 실거래가 반영률 간의 비선형 관계를 관찰하는 데 한계를 가지므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McMillen(2011, 2013)과 Hodge, et al.(2016)은 기존 선형회귀분석 모형 분석에서 벗어나 선형 분위회귀분석 모형 및 비모수 분위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이 분석방법은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분포의 평균과 편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McMillen(2011, 2013)의 연구에 따르면 Chicago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분포의 평균과 편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수직적 및 수평적 불형평성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Hodge, et al.(2016) 역시 Michigan 지역의 경우 수직적 불형평성이 역진적으로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주택가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주택의 특성에 따라 수평적 불형평성이 관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연구의 공통점은 선형 분위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실거래가 반영률과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치를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활용하여 각 주택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률 분포를 추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좀 더 엄밀히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는 McMillen(2011, 2013)과 Hodge, et al.(201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좀 더 관심을 둔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가격 모두 증가하였으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주택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실거래가 반영률 평균과 분포는 크게 변하게 되며, 이는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주택가격 상승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면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재정패널 활용 연구

학위논문

제목	저자	비고
상대 조세부담 인지편의에 대한 연구 - 세제변동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장윤정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이준원	학위논문(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금융학과
출산과 소비에 관한 가구 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	엄해림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금융학과

* 최근 1년간 재정패널을 활용한 학위논문들의 목록입니다.

학술논문

제목	저자	비고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강민조 전병욱	조세연구, 18(4): 67-92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성명재 박기백	한국경제의 분석, 24(3): 1-58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이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유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세무학연구, 35(4): 157-206
가구소득과 기부노력 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총 기부노력과 세속적 기부노력에 대한 비교분석	강철희 장재혁 이영빈	한국사회복지학, 71(1): 47-79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홍우형 남호현 주남균	재정학연구, 12(1): 55-82
납세자의 조세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강민조 전병욱	세무학연구, 36(1): 143-168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조하영 신우리 송헌재	응용경제, 21(1): 59-89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재정패널 활용 연구

학술논문

제목	저자	비고
납세자의 주거현황 및 보유세와 납세의식 관계 분석	신영효 정규언	세무와 회계저널, 20(2): 125-161
주택가격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고찰 : 한국의 패널 데이터 분석	박철범	한국경제의 분석, 25(1): 93-135
가구소득 측정방식의 특징 및 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방형/폐쇄형, 연/월 소득, 단일/다수 문항 측정을 중심으로	한혁	조사연구, 20(2): 29-60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분석	박명호 박대근	재정학연구, 12(2): 41-63
사망연령에 대한 계층별 인지 오류와 시사점	김대환 정현우 이동현 성미연	리스크 관리연구, 30(2): 1-32
넌프(Not-Out-Of-My-Pocket)현상 진단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보험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김대환 이봉주	보험학회지, 119(0): 33-67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홍우형	재정정책논집, 21(3): 3-33

* 최근 1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목록입니다.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재정패널 활용 기사 목록

재정패널
소식지

기사제목	언론매체명	일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오히려 축소해야”	머니투데이	2019-03-13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고소득층 사용액 연 276만원 줄어”	한국경제	2019-03-31
“집값 올라도 집주인 소비는 줄어… 주택을 미래 소비재로 보기 때문”	문화일보	2019-05-01
경조사비 10만원 냈더니 9만8800원 돌려받았다	중앙일보	2019-05-01
“기초연금 도입으로 5분위 배율 23→15배로 완화”	연합뉴스	2019-06-17
연금수령시 소득계층간 ‘빈익빈부익부’… “공적연금 강화해야”	매일경제	2019-08-02
“韓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OECD 절반 미달… 효율성 높여야”	이데일리	2019-09-13

* 최근 7개월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재정패널 관련 기사들의 목록입니다.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19. 10. 25.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2394

홈페이지 : <http://panel.kipf.re.kr>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